

도 내년 예산 첫 5조 돌파 전망

5조5억 도의회에 보고

강원도의 내년도 당초 예산규모가 조정 최초로 5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도는 4일 지난해 당초예산(4조 5589억원)보다 4416억원 늘어난 5조 5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도의회에 보고했다. 도교육청이 보고한 당초예산 규모는 2조 3805억원이다.

도의 내년 예산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과 민생경제, 재난안전, 글로벌화, 따뜻한 체감복지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도는 각 실·국별 예산 신청한도제를 처음 실시하고 업무추진비를 감축, 재정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대규모 사업 투자기간을 조정해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 당초 계획보다 적은 1500억 규모로 발행한다는 방침도 보고했다.

올림픽 예산은 경기장(2639억원)과 진입도로(1811억원) 등 대규모 공사 외에도 내년 치러질 G-2 기념행사와 홍보 예산 등이 다양하게 반영됐다.

레고랜드 교량과 관련 시설(231억원)과 오색케이블카(10억원), 군경제철책 철거(14억원) 등 도 핵심 현안 예산들도 반영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학생 장학금 지원(20억원)과 도내 공항활성화 등 최후순지사의 주요 복지 공약과 중점 사업 예산들도 포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도의회의 검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여진

아하! 그렇구나

입찰절차나 낙찰자 결정기준 위반의 효력

Q 국가계약법령에는 입찰의 진행과 낙찰자의 결정에 관한 기준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입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만 참여할 수 있는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는 입찰자격 사전심사 제도를 적용한다(영 제13조제1항 단서, 제42조제4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기준·방법 등에 관해서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요령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하는데(영 제42조제1항),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이행 실적, 기술 능력, 재무 상태 및 사회적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 심사기준에 관하여는 계약예규 적격심사 기준이 있다. 이와 같은 절차와 기준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무효는 강행규정인가?

A 대법원은 이러한 규정은 국가가 사인과의 사이에서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

하다고 본다. 입찰 절차와 기준에 관한 규정은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위반한 입찰의 효력은 무효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계약법령상 적격심사제 관련 규정은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고(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50129 판결), 입찰 절차나 낙찰자 결정기준에 관한 규정은 국가가 사인과의 사이에서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사이의 계약을 체결할 때 따라야 할 요건과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관한 국가계약법령이나 지방계약법령상의 요건이나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14812 판결).

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